

임금주도 성장론: 개념, 이론 및 정책*

Marc Lavoie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교수)
Engelbert Stockhammer (영국 킹스턴대학교 교수)

■ 머리말

2007년에 시작되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대된 서브프라임 재정위기를 계기로,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지난 30년간에 걸쳐 전통적인 지혜로 받아들여 왔던 이론과 정책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임금안정화(wage moderation)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수반된다면 궁극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제와 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한계점을 보여준다.

친자본적(pro-capital) 분배정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대안의 한 방법으로 친노동적(pro-labor) 분배정책에 근거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라고 본다. 이 대안적 방식은 임금주도 성장체제를 가능케 하는, 다시 말해 향후 훨씬 더 안정된 성장체제를 생성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입법적 변화와 구조적 정책을 수반한다. 최근에는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2010, 2011)에서 임금주도 성장전략의 정책지향적 개념이 현저하게 사용되었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임금주도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 이 글은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최한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임금 및 경제성장에 관한 새로운 전망 : 임금주도 성장의 잠재성(New perspectives on wages and economic growth : the potentials of wage-led growth)」 프로젝트의 결과를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분배와 성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지향적 기본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효과를 살펴보고, 어떤 국가경제를 임금주도 경제체제로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수요와 생산성체제에 관한 중요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일부 요약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임금주도 성장체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친노동적 분배정책 및 구조정책을 갖춘 임금주도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렇게 되면 임금주도 성장프로세스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이롭다.

■ 분배와 성장: 개념적 기본틀

친자본적 vs 친노동적 분배정책

소득분배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정의 산물이지만, 정부는 조세정책, 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에서 임금 비중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정책을 ‘친자본적 분배정책’으로, 임금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는 정책을 ‘친노동적 분배정책’으로 정의한다. 친자본적 분배정책은 대체로 자본소득의 증대보다는 ‘노동시장 유연성’ 또는 임금유연성 증대를 표방한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하로 이어지는 조치들뿐만 아니라 (교섭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단체교섭제도, (파업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고용보호법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또한 소득과세에서 자본수익을 제외시키거나 법인소득세를 인하하는 등으로 이차적 소득분배를 이윤과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조치들도 있다. 궁극적으로 친자본정책은 임금 억제를 강요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친노동정책은 종종 복지국가, 노동시장제도, 노동조합, 단체교섭 참여 능력(가령, 비노조 기업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간주된다. 또한 친노동정책은 임금 및 급여 분산도의 감소뿐 아니라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

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인상과도 관련된다. 친자본 분배정책의 경우, 실질임금의 증가 속도는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친노동 분배정책에서는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추어 또는 앞서서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 비중은 장기적으로 동일하거나 증가한다.

물론 기술변화, 무역정책, 세계화, 금융화, 금융규제 완화와 같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최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글의 초점은 분배정책과 경제체제의 상호작용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한다.

〈표 1〉 친노동 vs 친자본 분배정책

	분배정책		기타 요소
	친자본	친노동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유연성' - 최저임금 폐지 - 단체교섭 약화 - 임금 자제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국가' - 최저임금 인상 - 단체교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변화 - 세계화 - 금융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성장 미진 - 임금 비중 감소 - 임금 분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임금 증가 - 임금 비중 안정화 (또는 증가) - 임금 분산 감소 	

이윤주도 vs 임금주도 경제체제

다음으로는 '소득분배가 이윤 또는 임금에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면, 그러한 변화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한다. 단기적으로 총수요에, 장기적으로는 총수요의 증가율에, 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실제로 이러한 이윤 방향으로의 변화가 경제에 유리한 과급효과를 갖는다면, 앞서 정의한 바에 따라, 이 경제는 '이윤주도 경제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즉 이윤지향적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경제는 '임금주도 경제체제'가 된다. <표 2>는 분배정책과 경제체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여준다. 두 가지의 분배정책과 두 가지의 경제체제로 네 가지의 다른 결합 유형을 얻을 수 있다. 이 유형들은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이윤주도 경제에서

친자본 분배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이윤주도 성장프로세스가 나타난다. 역으로 임금주도 경제에서 친노동정책을 추구하면, 임금주도 성장프로세스로 이어진다. 이 두 유형이 <표 2>에서 서로 대각선으로 위치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분배정책과 경제구조는 서로 부합한다. 그러나 임금주도 경제에서 친자본정책을 추진하거나 이윤주도 경제에서 친노동정책을 추진한다면, 경제침체를 초래한다. 실제로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분배정책과 경제체제의 경우, 성장은 외부 자극(external stimul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성장 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표 2> 성장 체제의 유지 가능성

		분배정책	
		친자본	친노동
경제체제	이윤주도	- 이윤주도 성장프로세스	-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
	임금주도	-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	- 임금주도 성장프로세스

<표 2>의 네 가지 결합 형태를 통해 여러 중요한 논리를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표는 여러 정치적 이념을 분류하는 데 유용하다. 첫 번째 칸(이윤주도 경제의 친자본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이 시나리오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적 이념과 종종 적하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상통한다. 이윤 수혜자와 사용자 및 고위층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정책은 거시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이윤이 높아지면 기업가와 간부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기계구비 및 생산력 증대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용률 증가 및 구매력 증가의 형태로 적하 효과가 나타나므로, 궁극적으로는 일반 근로자가 임금 감축 및 근로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이 시나리오는 ‘이론적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in theory)’라고도 할 수 있다.

임금주도체제에 친노동정책이 결합된 칸에는 여러 경제학자들이(가령, Marglin & Schor 1990)이 전후 시대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선진경제에서) 복지국가의 확충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있기 전까지는 실질임금의 상승이 노동생산성과 이윤을 큰 폭으로 높이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성장의 황금시대로 이어졌다.

〈표 3〉 경제체제/분배정책 기본들에 의한 실제 성장전략

		분배정책 및 전략	
		친자본	친노동
경제체제	이윤주도	'이론적 신자유주의' 적하 자본주의	'불운한 사회개혁(Doomed social reforms)' (TINA)
	임금주도	'실제적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in practice)' - 불안정하며, 외적 성장 동인에 의존(부채주도 성장 또는 수출주도 성장)	사회적 케인스주의(social Keynesianism) 전후 황금시대(Postwar Golden age)

오른쪽 칸(이윤주도 경제와 친노동정책의 결합)은 '불운한 사회개혁'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보적 사회개혁이 감행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는 마가렛 대처의 말로, 이후에도 여러 연구기관과 심지어 좌파 정치가들에 의해서도 반복된 바 있는 유명한 'TINA(there is no alternative = 대안은 없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근로자 보상이나 임금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는 불가피하게 경제 둔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러한 소득분배 변화가 해당 경제의 이윤주도체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 시도는 바로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친자본 분배정책이 임금주도체제와 결합된 경우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유형을 '실제적 신자유주의'라고 묘사하는데,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친자본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그 경제성고가 황금 시기에 이룩한 성과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실제적 신자유주의에는 비대해진 금융부문 또는 외부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수반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재정적 불안이 초래된다. 이러한 외적 동인에 대한 의존 —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 — 은 사회가 추구하는 친자본적 분배정책과 임금주도 경제체제하에 있는 분야의 내재적 특성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성장 부진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생겨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ein and Mundt(2012)에서 다루고 있다.

■ 이윤주도체제 또는 임금주도체제?

본 장에서는 임금주도 경제체제와 이윤주도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Boyer(1988) 이래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 따라 수요체제와 생산성을 구분하였다. 분량의 제한 때문에 이 글에서는 수요 측면만을 다루도록 한다.

국내 수요체제

경제가 임금주도체제인지 이윤주도체제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총생산(Y)의 네 가지 요소들, 즉 총수요의 네 가지 요소인 소비(C), 민간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수출-수입, NX)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 임금 비중의 증가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들의 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를 임금주도 수요체제라고 하고, 이윤 비중의 증가(또는 임금 비중의 감소)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들의 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를 이윤주도체제라고 한다.

먼저 (외생적인) 임금 비중(또는 노동생산성이 불변할 때 실질임금) 증가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 보자. 이윤의 소비 성향과 임금의 소비 성향이 동일하다면 실질임금의 변화는 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는 주류경제학 모델에서 일반화된 가정으로 소득분배의 역할이 없다. 그러나 임금의 소비 성향이 이윤의 소비 성향보다 높다면 임금 쪽으로 소득분배가 이동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 소득자는 이윤 수혜자에 비해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임금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면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임금 비중이 증가하면 소비와 총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는 임금 비중이 증가할 때 민간투자지출이 감소하면서 상쇄된다. 기대 수익성은 과거에 실현된 수익성과 매출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가속화 효과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투자는 임금 비중의 증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수익성 효과는 최초로 임금주도체제와 이윤추구체제의 이분법을 정의한 Bhaduri and Marglin(1990)에 의해 정립되었다.

물론, 소득분포 외에도 총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많다. 통화정책, 회계정책, 석유과동과 같은 여러 돌발적 상황, 주식시장 버블 붕괴, 실질환율 변화, 외국 GDP 증가율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년도 대비 추이에 있어, 소득분배는 총수요 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뿐이며, 다른 동향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목격된 바와 같이,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크게 변화한다면, 결국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순수출을 포함한 수요체제

지금까지는 순수출은 고려하지 않고 총수요의 국내 요소들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실질임금의 증가는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임금 비중 증가로 인한 순수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순수출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소득분배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 국제무역과 순수출을 추가하면 분명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먼저, 임금 비중 증가로 인한 긍정적 국내 효과는 순수출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면 뒤바뀌게 될 수도 있다.

둘째, 한 국가의 경제가 임금주도형인지 이윤주도형인지는 그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한 국가의 수출은 또 다른 국가의 수입이고, 각 개별 국가는 수출을 늘림으로써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모든 국가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내수의 효과와 (순수출을 포함하는) 전체 효과를 각각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세계경제가 한 국가에 미치는 효과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효과만 포함하는데, 임금 비중의 변화가 모든 무역 상대국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로 이해를 해야 한다. 전 세계 임금 비중의 변화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임금 비중 증가로 인한 총체적 효과를 감안할 때 이윤주도 수요체제라 하더라도, 그 국가의 내수가 임금주도적이라면 모든 국가의 임금 비중이 동시에 상승할 때 그 이윤주도 국가의 총수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요체제와 관련된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검토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 임금주도 성장프로젝트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 결과

Bhaduri and Marglin(1990)의 포스트카레츠키언 모형은 최근에 계량경제학적 수단으로 수요 체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수의 실증적 연구에 영감을 주고 있다. Onaran and Galanis(2012)뿐 아니라 Hein and Vogel(2008), Stockhammer and Stehrer(2011)이 이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시간대의 자료들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임금주도 경제체제로 분류되는 OECD 회원국이 몇 안 된다는 것으로 대부분 결과를 일치하였다. 총수요체제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의 동질성이 떨어졌다.

Onaran and Galanis(2012)는 G20 국가 대부분에 대한 새로운 일관된 수치를 제공하였다. <표 4>는 Onaran and Galanis(2012)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G20 국가 대부분의 (조정) 임금 비중 감소로 인한 효과를 보여준다. 더 정확하게는, 개별 국가의 이윤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그 국가의 수요 구성 요소들(A, B, C열), 민간 초과수요(앞의 세 구성 요소의 합인 D열), 총수요(승수효과를 감안한 E열)에 미치는 효과를 상술하고 있다. A열과 B열의 수치를 비교하면, 그 합계가 음수(-)이며, 따라서 모든 표본 국가는 임금주도 내수체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윤 비중 증가가 민간 초과수요에 미치는 영향(D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적이며, 이는 해당 국가들이 임금주도 총(total)수요체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윤주도 총(total)수요체제인 국가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들은 서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에서의 소득분배 변화로 인한 효과는 전 세계적인 소득분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표 4>는 국제수요 구성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담고 있다. G열은 모든 G20 국가에서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임금 비중이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 효과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부정적이다. 캐나다·멕시코와 같이 개별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윤주도 수요체제로 판단되었던 일부 국가들도 무역 상대국들이 임금 비중의 감소를 경험한다면 분명히 수요 감소를 겪게 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임금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면 G20의 총 GDP는 0.36% 감소하며, 이러한 사실은 왜 심지어 이윤주도 총수요체제인 국가들도 세계적 임금 비중 하락 시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그에 따르면, 적어도 총수요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으로 협의, 조정된 임금주도 성장전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에서 총수요는 분명히 임금주도적이다. 개별적으로 이윤주도인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윤 비중이 수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순수출에 달려 있다. 실제적으로, 이는 일부 개별 국가들이 임금안정화(wage moderation)를 통해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ur policies)’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전 세계 차원의 수요에 대한 지속가능한 전략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수요의 원천으로서 임금의 역할을 실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 4〉 Onaran and Galanis(2012) 연구 결과 요약 : 국가 및 전 세계 이윤 비중 1%포인트 증가로 인한 효과

	C/Y	I/Y	NX/Y	민간 초과수요에 대한 /Y	총수요에 대한 효과	전 세계 이윤 비중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A	B	C	D (A+B+C)	E	G
유로권 12개국	-0.439	0.299	0.057	-0.084	-0.133	-0.245
독일	-0.501	0.376	0.096	-0.029	-0.031	-
프랑스	-0.305	0.088	0.198	-0.020	-0.027	-
이탈리아	-0.356	0.130	0.126	-0.100	-0.173	-
영국	-0.303	0.120	0.158	-0.025	-0.030	-0.214
미국	-0.426	0.000	0.037	-0.388	-0.808	-0.921
일본	-0.353	0.284	0.055	-0.014	-0.034	-0.179
캐나다	-0.326	0.182	0.266	0.122	0.148	-0.269
호주	-0.256	0.174	0.272	0.190	0.268	0.172
터키	-0.491	0.000	0.283	-0.208	-0.459	-0.717
멕시코	-0.438	0.153	0.381	0.096	0.106	-0.111
한국	-0.422	0.000	0.359	-0.063	-0.115	-0.864
아르헨티나	-0.153	0.015	0.192	0.054	0.075	-0.103
중국	-0.412	0.000	1.986	1.574	1.932	1.115
인도	-0.291	0.000	0.310	0.018	0.040	-0.027
남아프리카공화국	-0.145	0.129	0.506	0.490	0.729	0.390

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유로존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시뮬레이션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료: Onaran and Galanis (2012, 'Tables 11 and 13). '전 세계 이윤 비중의 가감이 총수요(aggregate demand)에 미치는 효과': 국내승수효과와 국제무역효과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이윤 비중의 동시 변화로 인한 교화.

■ 결론 : 임금주도 성장 - 생존가능한 경제전략

임금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중적 기능을 갖는다. 수요의 원천인 동시에 생산비용이 된다. 임금 비중의 증가는 수요에 여러 영향을 미치며, 실제 수요체제가 임금주도인지 아니면 이윤주도 인지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를 통해 해석한 바로는, 대부분의 경제국가에서 내수체제는 임금주도일 가능성이 크다. 개방경제에서 순수출효과는 국내효과를 압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개별 국가에서 총수요(total demand)는 임금주도적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 세계경제 전체는 임금주도 수요체제에 해당하며 모든 국가가 동시에 친노동적 분배정책을 추구한다면 이윤주도적인 국가들마저도 자국의 경제활동이 외국의 빠른 성장세의 영향으로 활성화되면서 총수요(aggregate demand)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국가가 수출주도 전략을 추구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수출주도 전략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동시에 순수출국이 될 수는 없으므로 절반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 비중 증가의 공급 측면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임금 증가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가 여럿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임금 확대의 장기적 효과가 경제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생존가능한 방안으로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전략이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친노동적 분배를 기조로 하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것으로서 금융부문 적정 규제를 내용으로 한다.

임금 비중은 높이고 임금 분산을 낮출 수 있는 분배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또는 확립,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조 입법 개선,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¹⁾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정통 경제이론을 거스르는 것으로, 공공예산 적자를 줄여야 하는 압박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경제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

1) 메타분석에 의하면, 주류 학자들이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을 근간으로 주장한 바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Doucouliagos and Stanley(2009)에 의하면, 최저임금 연구는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들은 최저임금과 고용 사이에 어떠한 부정적 관계도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긴축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며, 구조적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인하의 미화된 표현일 뿐이다. 오히려, 유효수요가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에 필요한 것은 국가개입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다. 성공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패키지란 핵심 구성 요소로서 임금 증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성 증대와 함께 임금이 증가하여야 비로소 부채가 늘지 않으면서 소비지출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현대적 버전의 임금주도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 구조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탈규제 상태의 금융부문은 투기적 성장을 부채질하였고, 결과적으로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자본유동을 관리하고, 금융부문을 협소한 의미의 은행업으로 재조정하며,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금융 혁신을 철폐하고, (가령, 금융거래세의 형태로) 금융부문의 재정기여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 Hein and Mundt(2012)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전 지구적 케인스식 뉴딜(Global Keynesian New Deal)’이다. **KLI**

참고문헌

- Bhaduri, A. and Marglin, S.(1990),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4(4), pp.375~393.
- Boyer, R.(1988), “Formalizing growth regimes,” In G. Dosi, C. Freeman, R. Nelson, G. Silverberg and L. Soete(eds.),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Pinter Publishers, London and New York, pp.608~630.
- Doucouliagos, H. and Stanley, T. D.(2009),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2), pp. 406~428.
- Hein, E. and Mundt, M.(2012), “Financialisation and the Requirements and Potentials for Wage-led Recovery – A review focussing on the G20”, ILO Working Pap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37, Geneva.

- Hein, E. and Vogel, L.(2008), “Distribution and Growth Reconsidered – Empirical results for Austria,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the UK and the USA,”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2(3), pp.479~511.
- Krassoi Peach, E. and Stanley, T. D.(2009), “Efficiency Wages, Productivity and Simultaneity : A meta–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Labor Research* 30(3), pp.262~268.
- Lavoie, M. and Stockhammer, E.(2012),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LO Working Pap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1.
- Marglin, S. and Bhaduri, A.(1990), “Profit Squeeze and Keynesian Theory,” In Marglin and Schor(1990), pp.153~186.
- Marglin, S. and Schor, J.(eds.)(1990),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 Oxford: Clarendon.
- Onaran, Ö. and Galanis, G.(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ILO Working Pap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0, Geneva.
- Stockhammer, E. (2012), “Why have Wage Shares Fallen? A pane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ILO Working Paper, forthcoming.
- Stockhammer, E. and Stehrer, R.(2011), “Goodwin or Kalecki in Demand?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and Aggregate Demand in the Short Ru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3(4), pp.506~522.
- Storm, S. and C. W. M. Nastepaad(2012), “Wage–led or Profit–led Supply: Wages, Productivity and Investment,” ILO Working Pap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36.
- UNCTAD(2010),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0: Employment,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UNCTAD: Geneva.
- _____(2011),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1: Post–Crisis Policy Challenges in the World Economy*, UNCTAD: Geneva.